

■ 공공기관 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

# 新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

일 시 : 2013. 05. 22(수) 14:00~17:00

장 소 : The-K서울호텔(구, 서울교육문화회관) 가야금홀(2F)

주 최 : 한국조세연구원(공공기관연구센터)

후 원 : 기획재정부

## 개 요

- 주 제            新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
- 일 시            2013년 5월 22일(수) 14:00~17:00
- 장 소            The-K서울호텔(구, 서울교육문화회관) 가야금홀(2F)

### □ 진행순서

- 13:30~14:00    등    록
- 14:00~14:10    개회식
  - ▶ 개회사    흥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직무대리
- 14:20~15:50    Session 1. 新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
  - ▶ 사회자    송대희 前한국조세연구원장
  - ▶ 발표자    박    진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
  - ▶ 토론자    권해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(한성대 행정학과 교수)
  - 김    철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
  -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
  -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
  - 이경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
  -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
  -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
  - 조한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획조정팀장
  - 최광호 한국도로공사 미래경영처장
- 15:50~16:00    휴식(Coffee Break)
- 16:00~17:00    Session 2. 종합토론
  - ▶ 사회자    박    진
  - ▶ 토론자    권해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(한성대 행정학과 교수)
  - 김    철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
  -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
  -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
  - 이경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
  -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
  -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
  - 조한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획조정팀장
  - 최광호 한국도로공사 미래경영처장
- 17:00~            폐회

# 목 차

I. 문제 제기 .....	1
1. 추진배경 .....	1
2. 여건 변화와 진단 .....	2
II. 공공기관 정책방향 .....	4
III. 주요 과제 .....	5
1. 협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.....	5
2. 사회적 책임 강화 .....	8
3. 공공기관의 핵심역량 강화 .....	9
4. 자율책임경영 확립 .....	11
별첨 1.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공론조사 .....	13
별첨 2.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(일반시민, 전문가, 공공기관 종사자) .....	14

# I. 문제 제기

## 1. 추진배경

-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, 전기, 물, 의료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
  - '13년 현재 공공기관은 총 295개 기관으로 총예산은 GDP의 36%, 정부예산('12년 325조)의 1.4배 수준
  
- 최근 10년의 공공기관 정책
  - 정책목표: 각 개별 공공기관의 비용 대비 성과 극대화, 대국민 서비스 개선
  - 정책수단: 기관별 비용절감과 성과 제고
    - 비용절감: 기관 통폐합, 민영화, 구조조정 등
    - 성과 제고: 각 기관별로 사업성과 제고, 대국민서비스 개선, 성과연봉제 등
  - \* 대체로 신공공부문관리론(NPM)에 입각하여 추진
  - 추진방식: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을 하달하는 top-down 방식 중심
  
- 최근 NPM의 대체론 혹은 보완론 대두
  - 새로운 관료제 국가론: 더 전문적, 더 효율적, 시민에 대한 더 대응적인 전통적 정부기구, 공공 제도를 강조
    - Neo Weberian State (Druschler and Kattel, 08; Lynn, 2008)
  - 새로운 공공거버넌스론: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조
    - Neo Public Governance (Pierre and Peters, 2000; Frederickson, '05; Kaufmann 외, '09; Bellamy and Palumbo, '10; Osborne, '10)
  - 새로운 공공서비스론: 시장, 효율성, 고객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민주적 시민성 (democratic citizenship),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와 협력, 조직적 인본주의를 강조
    - New Public Service (Denhardt and Denhardt, 2011)

## 2. 여건 변화와 진단

### □ 여건의 변화

- 개별 기업이나 기관의 생산성이 중시되는 경제로부터 국가의 **총체적 경쟁력**이 중시되는 경제로 이행
  - 일자리 확대 등 공공기관의 **사회적 책임**을 강화할 필요
- 빅 데이터, 클라우드 컴퓨팅, Web 3.0 등 IT의 발달로 공공기관간 **협업**의 필요성과 가능성 확대
- 공공기관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서비스 공급자도 NGO, 지역사회로 다양해져 **정부의 역할에 한계**
  - 공공기관의 창의성 발현을 위해 **책임경영**을 강화할 필요

### □ 현재 공공기관 관리방식 진단

- 그간 **개별 기관**의 비용 대비 성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경쟁이 심화되어 상호 협력을 통한 **시너지** 창출 미흡
- 그러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맞춤형, 융합형 등으로 다기화되고 있어 기관간 협력 필요성은 증대
  -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 발달로 **연계, 협력** 가능성 확대
- 또한 일자리 확대, 사회적 형평고용 등 공공기관의 **사회적 책임**에 상대적으로 소홀
- ☞ 공공기관의 **사회적 책임**을 확대하고 **협업과 개방**을 전제로 한 **맞춤형 국민 서비스**를 개발할 필요

### □ 현재 공공기관의 내부 여건 진단

- 그간 **경영효율성, 노사관계** 등 개선되었으나 조직의 불안정성과 노사갈등을 야기하여 **소극적 조직문화** 심화
- 공공기관의 사업확대 과정에서 **부채**가 급증하여 국민경제 부담 우려
  - \* 전년 대비 부채증가액(조원) : ('09)46.8 → ('10)60.2 → ('11)62.0 → ('12)34.4
- ☞ 공공기관의 **책임경영**을 확립하고 **핵심역량**을 강화하는 제도적 틀 구축 필요

□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

- 기존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방향 하에 추진과제를 선정

<표 1> 공공기관 정책의 변화 방향과 추진과제

구분	기존의 공공기관 정책	향후의 공공기관 정책과제
정책 목표	공급자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 개별기관의 성과/투입 극대화	①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② 사회적 책임 등 공공기관의 총체적 기여 강화
정책 수단	기관별 비용절감 및 성과관리	① 공공기관간 협업과 대국민 정보공개
추진 전략	사안별 구조조정 top-down 방식	③ 공공기관의 핵심역량 강화 장치 제도화 ④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확립

\* ①~④ 번호는 다음 페이지의 4개 추진과제

## II. 공공기관 정책방향

### < 추진 체계도 >



### Ⅲ. 주요 과제

#### 1.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

##### 가. 대국민 공공정보 공개 확대

###### □ 3대 기본방향

- 국민과의 **접촉 창구**를 다양화: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별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
  - 국민 맞춤형 서비스 추진방향: 택배형, 맞춤형, 융합형 서비스
- **개방성과 쌍방향성**의 확대: 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정책결정 과정을 개방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절차를 구축하여 국민과의 **협치**를 달성
- **신뢰 구축**: 효과적인 정책홍보와 갈등관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**거래비용**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

###### □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

- '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' 제정시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경영평가 등에 반영 검토
- 기관별 더 많은 정보공개를 위해 경영실적, 경영상황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공공기관 **연차보고서**를 작성하여 배포

###### □ 개방정보의 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

- 민·관이 소통할 수 있는 '플랫폼'을 구축하여 개방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들의 활용 및 참여를 유도
-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하기 편하도록 통합공시 사이트인 알리오를 개편



## □ 대국민 소통역량 강화 방안

- 국민체감도 조사를 **국민신뢰도** 조사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
  - 현재 국민체감도 조사는 충실한 사업수행, 사회적 책임 이행, 사회적 윤리 준수 등 모두 신뢰도와 관련된 개념을 묻고 있음.
- 경영평가와 무관하게 공공기관의 대국민 **소통역량**을 측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주요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방안 검토

## □ 고려사항

- 공공기관 정보가 과다하게 제공될 경우 **스팸**과 같은 부정적 효과 발생 우려  
→ 개인의 선택 보장 필요
- **결집된 소수**가 전체 시민을 대표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
- 온라인상의 공공부문 정보와 서비스의 **신뢰도** 확보 필요
  - 신뢰도란 콘텐츠의 진실성, 전문성·유용성, 안전성(개인정보보호와 기술적 시스템의 안전성)을 의미
-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

## 나. 공공기관간 협업 활성화 체계 구축

### □ 협업과제 발굴

- 공공기관, 국민제안, 민간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협업과제를 발굴
- 협업 활성화는 정보공유로부터 시작하므로 기관별 공유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수요 조사 실시

### □ 협업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

- 협업사업과 관련된 예산·인력은 공공기관 예산지침, 증원 심의시 우선 고려
- 가칭 **협업점검회의(기재부 주관)**를 신설,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결
  - 분야별·과제별 책임·협력기관 선정, 기관간 책임범위, 추진방식 등 과제별 협업 기초체계를 마련
- 공공기관간 협업은 부처간 협업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므로 **부처**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구할 필요

□ 협업성과 평가 및 환류 강화

-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, 확산
- 협업과제 수혜자가 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**고객만족도** 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추진
- 협업평가 결과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, 협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기능점검 등을 통해 조직의 융합을 검토

<표 2> 분야별 공공기관 협업 대상업무 예시

분야	기관명	업무명
금융	한국자산관리공사, 금감원, 금융위원회, 미소금융재단, 신용회복위원회 등	개인신용회복 지원사업
	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정책금융공사, 중소기업청	중소기업 보증 및 지원사업
	한국무역보험공사,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정책금융공사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중소기업진흥공단	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
	한국무역보험공사, 한국수출입은행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	수출지원
보건 복지	근로복지공단	산재보상
	국민연금공단	장애인등록심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
	한국산업인력공단, 한국고용정보원, 한국장애인고용공단	고용촉진 업무 및 고용정보망 운영
	한국산업인력공단, 한국고용정보원, 한국장애인고용공단	고용정보망 운영
산업 진흥	한국환경산업기술원, 한국표준협회, 중소기업진흥공단	녹색경영사업
교육 연구	한국산업인력공단, 한국해양수산연수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	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사업 (해양플랜트전략분야 인력 양성)

## 2. 사회적 책임 강화

### 가.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형평 고용

#### □ 일자리 창출

- **인력 재배치:** 정년퇴직 등에 따른 채용수요 발생시, 기능점검을 통해 유망분야 혹은 국정과제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
- **제도개선:** 임금피크제, 대체채용 등을 통해 **채용여력 확대**
  -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여유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
  - 군입대·육아휴직자 대체채용을 활성화
  - 공공기관 사업과 민간고용의 연계성을 강화
- **글로벌 역량 강화:**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
- **인력 증원:**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증원도 고려
  - 안전관리·보건복지, 컴퓨터보안 관련 인력채용 기준을 마련

#### □ 사회형평 고용

- 스펙 중심의 서류전형과 단순 지식 위주의 필기시험을 지양하고 **직무능력 중심의 평가방안**을 마련
  -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채용토록 청년인턴제도를 보완·활성화
- **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**을 위해 전환기준, 차별해소 등 「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」 마련
- **여성인력 활용도 제고**를 위해 단시간근로를 활성화하고 분야별로 여성인력 채용 목표비율을 제시
  - 여성관리자 목표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
- **고졸자 채용확대 및 능력발전** 지원을 위해 기관별로 중장기 채용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관련 인사·보수규정을 마련
- **지역인재 채용확대**를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채용할당제, 채용목표제, 전형 단계별 가점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권고

## 나. 중소기업과의 상생·협력 강화

### □ 사업 단계별 협업을 추진

- 기술개발 단계: 공공기술 개발, 기술이전 및 전수, 신기술 테스트 베드
- 시장진입: 진입장벽 제거, 제한경쟁 확대, 마케팅 지원
- 계약 및 사후관리: 하도급 관리 책임 강화, 주계약자 공동도급제, 성과 공유제 확대
- 해외진출: 컨설팅 지원, 공동마케팅, 중소기업 컨소시엄

### □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'공공기관-중소기업 상생협업협의체'(가칭) 구성 검토

- 정부부처, 주요 공공기관,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,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애로 사항을 취합하고 협업, 업무조정 등을 통한 해결방안 논의
- 우수사례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, 공공기관, 중소기업 공동으로 우수사례 발표, 사례집 발간, 워크숍 개최 등 추진

## 3. 공공기관의 핵심역량 강화

### 가. 상시적 기능점검의 제도화

#### □ 상시적 기능점검을 통해 협업과제, 기능조정과제 등을 도출

- 기관간 통폐합보다는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중점을 두되, 기능 축소, 유사·중복 조정 등 기능조정도 병행
  - 추진체계: 관계부처, 민간전문가로 분야별 기능점검 TF를 구성하여 추진하되, 부처협의, 의견수렴을 거쳐 공운위 심의·의결
- '13년중 우선점검 대상에 대한 기능조정(안) 마련
  - 예시: 해외진출이 급속히 증가한 기관, 정보화 분야, 고용지원 관련 분야, 안전점검 분야, 중소기업 지원 등 산업진흥 분야, 잠재적 재무리스크가 큰 기관, 기타 경영평가 등을 통해 기능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기관

#### □ 시장화 테스트 (market test) 도입

- 공공서비스 공급자 선정시 객관적인 기준·절차 마련
- 대상: 새로운 기능이나 자회사 신설시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 확대
  - \* 예시: 급유시설(인천공항), 물문화관(수공) 등 민간과 경합가능성 있는 기능
- 민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·운영하되, 관련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확보

#### 나. 공운법 관리체계 개편

#### □ 공공기관 지정 및 운영체계의 합리화 추진

- 현재 기타공공기관의 일부는 경영평가 대상이며 대통령 임명으로 되어 있어 지정분류와 관리방식에 불일치 발생
-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폐지하고 공공기관을 시장성 및 규모를 고려 단순하게 재분류하는 방안 검토
  - 지정분류가 임명권자나 피평가 대상 여부와 일치하도록 개선
- 경영자율권제도와 지정분류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

#### □ 공공기관 운영에 중기관점의 도입

- 단년도 성과 중심 평가제도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중장기적인 경영시야를 가지기 어려운 여건
- 정부의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차원의 중기계획 수립을 유도
- 경영평가제도에도 중기관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
  - 중장기 경영목표, 인력, 재무관리를 경영평가, 기능점검과 연계

## 4. 자율책임경영 확립

### 가.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

#### □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

- 자구노력을 포함한 '13~'1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관별 재무관리계획의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
- 자산 2조원 미만인 기관 중에도 재무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\*에는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
  - \* 부채가 자산보다 큰 경우,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경우 등
-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기채발행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

#### □ 공공기관 부채구조 개선

- 단기 재무위험에 선제 대응키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-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여 재무개선이 요구되는 기관의 경우 기관별 별도의 대책 마련 추진

#### □ 공공기관 사업관리 강화

-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는 **구분회계**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**심층평가제도** 도입
- 공공기관의 자체 **출자회사** 성과관리 시스템 마련을 유도

### 나.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

#### □ 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부담을 축소하고 기관 특성을 충분히 반영

- 평가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평가 주체·주기·방법·결과 활용 방안도 재설계하여 평가 부담을 간소화

#### □ 기관장 평가는 「경영성과협약제」에 기반하여 평가

-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장간에 「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」를 체결하고 기관장 재임기간 중 1회 이행실적을 평가

□ 경영평가 항목에 새로운 사회적 수요 반영

- 안전, 환경 등 對국민 공공서비스 개선 목표·기한을 설정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방법을 신규 도입
- 기타 본 보고서의 주요 정책방향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

다. 공공기관 임원 인사 투명성 제고

□ 임원의 전문성 제고

- 임원의 직위별 전문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교육 강화
  - \*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으로 개선
- 상임이사와 감사의 임기제를 개선(예시: 임기를 2년 → 3년)

□ 법적 절차의 실효성을 강화

- 임추위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고 그 중 위원장을 호선
- 공운위의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보류, 부결 등 의결기능을 활성화하여 관행적인 2배수 압축방식을 개선

라.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확대

□ 경영자율권제도의 평가대상을 시장성 기준 등으로 유형화하고, 유형별로 차등하여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

-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더 높은 수준의 자율권을 부여
- 중장기적으로 경영자율권 적용대상 기관은 기관경영평가를 자율경영평가로 대체하는 방안 추진

□ 경영상의 간섭·규제 최소화로 실질적 자율권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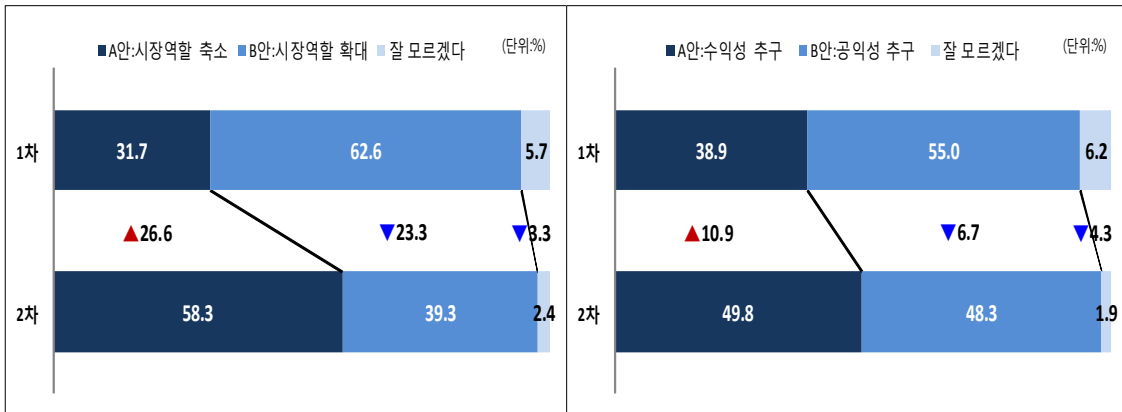
- 공공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의 불필요한 경영 간섭·규제 등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TF 등을 운영하여 정비 추진

# 별첨 1.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공론조사(2013. 2.2 시행)

- 토론 전후에 같은 설문을 시행하여 비교하는 방식(국민 200명 대상)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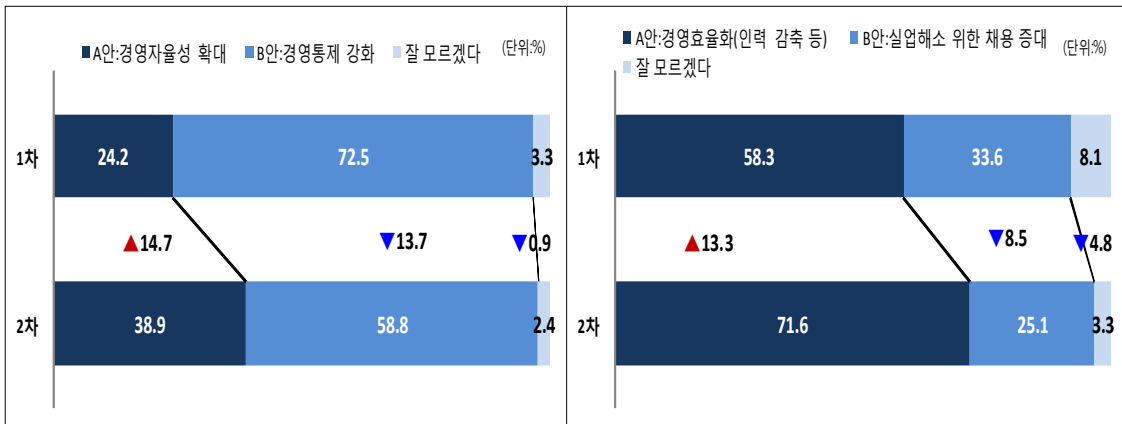
공기업의 시장참여에 대한 의견

공기업의 사업목적에 대한 의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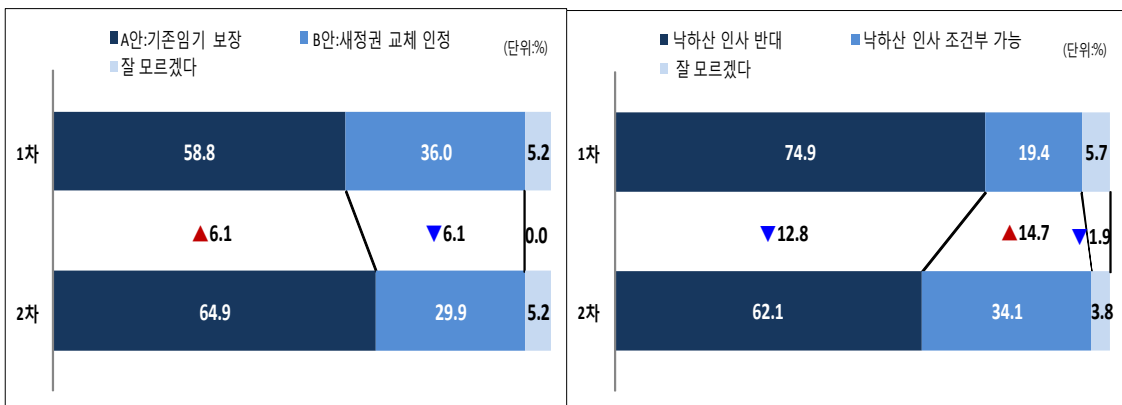
공기업의 통제수위에 대한 의견

공기업의 인력관리에 대한 의견



공기업의 임원 임기에 대한 의견

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의견





## 별첨 2.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(일반시민, 전문가, 공공기관 종사자)

### [조사개요]

구 분	내 용
<b>모집단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일반시민(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),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, 공공기관 종사자</li> </ul>
<b>표본크기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일반시민 1,000명(유선 332명, 무선 668명), 전문가 117명, 공공기관 종사자 200명</li> </ul>
<b>조사방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일반시민: 유무선전화 RDD(임의번호걸기, Random Digit Dialing)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(CATI)</li> <li>● 전문가와 공공기관종사자: 이메일 조사(CAWI, Computer Aided Web Survey)</li> </ul>
<b>조사기간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일반시민: 2013년 4월 29일 ~ 4월 30일 (2일간)</li> <li>● 전문가와 공공기관종사자: 2013년 4월 29일 ~ 5월 16일 (18일간)</li> </ul>
<b>조사기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주)한국리서치</li> </ul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질문요약 (문 13~17은 전문가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만 질의)</li> <li>[문 1]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관한 입장</li> <li>[문 2] 제2철도공사 설립에 관한 입장</li> <li>[문 3] 산업은행 민영화에 관한 입장</li> <li>[문 4]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에 민간 사업자 참여를 허용하는 것에 관한 입장</li> <li>[문 5]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공공기관 합리화 방향</li> <li>[문 6] 공공기관 성과 증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</li> <li>[문 7] 공공기관 방만함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</li> <li>[문 8] 공공기관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</li> <li>[문 9] 낙하산 인사에 대한 입장</li> <li>[문 10] 공공기관의 임원인사 방식에 대한 입장</li> <li>[문 11]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입장</li> <li>[문 12] 공공기관의 인력운용에 대한 입장</li> <li>[문 13] 공공기관간 협업과 정보공유 정도</li> <li>[문 14]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한 의견</li> <li>[문 15] 공공기관의 운영방식</li> <li>[문 16]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량</li> <li>[문 17] 공공기관의 자율성</li> </ul>
---

1) 주민등록인구현황(2013. 2월 기준)에 따라 성별, 연령별,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

[문 1] 정부는 현재 100% 정부 소유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중 49%를 장기적으로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.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떤 입장에 찬성하십니까?

(단위: %)

구분	정부지분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4조원 정도 소요되는 공항 확장사업을 하는 방안	정부지분을 유지하고 공항 확장사업 자금은 부채로 조달한 후 이를 갚아 나가는 방안	잘 모르겠다	계
일반시민	25.6	<b>47.5</b>	26.9	100.0
전문가	35.9	<b>64.1</b>	0.0	100.0
공공기관종사자	23.5	<b>67.0</b>	9.5	100.0

[문 2] 호남고속철도를 운영할 제2철도공사 설립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.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입장에 찬성하십니까?

(단위: %)

구분	공기업간 경쟁을 통해 요금이 인하되고, 부채가 줄어들므로 제2철도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입장	노선별로 독점체제가 유지되어 공기업 수만 늘어나게 되므로, 제2철도공사를 설립하지 말자는 철도노조 입장	잘 모르겠다	계
일반시민	42.2	41.5	16.3	100.0
전문가	<b>54.7</b>	44.4	0.9	100.0
공공기관종사자	42.5	<b>51.0</b>	6.5	100.0

[문 3] 정부는 2009년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 기능을 분리하여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남은 산업은행은 민영화할 계획이었습니다. 다음 중 어느 의견에 찬성하십니까?

(단위: %)

구분	당초안대로 산업은행을 민영화하여 시중은행과 같이 경쟁토록 하는 방안	산업은행의 정부지분을 유지하여 정책금융 기능도 같이 수행토록 하는 방안	잘 모르겠다	계
일반시민	30.9	<b>54.4</b>	14.7	100.0
전문가	<b>50.4</b>	47.0	2.6	100.0
공공기관종사자	<b>53.5</b>	42.5	4.0	100.0

[문 4] 지금은 천연가스 도입과 도매를 가스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가스공사 이외에 민간 사업자를 허용하여 천연가스 도입과 도매에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의견에 찬성하십니까?

(단위: %)

구분	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에 민간도 참여시켜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	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는 지금처럼 가스공사가 전담하는 방안	잘 모르겠다	계
일반시민	51.6	41.6	6.8	100.0
전문가	68.4	31.6	0.0	100.0
공공기관종사자	57.0	40.5	2.5	100.0

[문 5]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 합리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다음 중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(단위: %)

구분	공공기관이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	공공기관의 방만함을 해소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는 일	공공기관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	잘 모르겠다	계
일반시민	10.4	33.8	52.2	3.6	100.0
전문가	23.1	36.8	40.2	0.0	100.0
공공기관종사자	60.5	6.0	31.0	2.5	100.0

[문 6] 공공기관이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(단위: %)

구분	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	공공기관간 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	공공기관이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	기타	잘 모르겠다	계
일반시민	39.0	15.4	42.0	0.9	2.8	100.0
전문가	48.7	34.2	12.8	4.3	0.0	100.0
공공기관종사자	42.5	32.0	23.0	1.5	1.0	100.0

[문 7] 공공기관의 방만함을 해소하여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(단위: %)

구분	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 하는 것	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등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것	공공기관의 기능을 민간이 수행토록 하거나 경쟁을 도입하는 것	기타	잘 모르겠다	계
일반시민	32.1	<b>40.5</b>	21.6	0.7	5.0	100.0
전문가	29.9	<b>48.7</b>	19.7	1.7	0.0	100.0
공공기관종사자	14.5	<b>65.5</b>	12.5	5.5	2.0	100.0

[문 8] 공공기관의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(단위: %)

구분	공공기관의 임원 임명 방식을 개선하는 것	공공기관이 회계와 재무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는 것	공공기관이 보유한 DB를 공개하고 국민과 더 소통하도록 하는 것	기타	잘 모르겠다	계
일반시민	15.1	30.0	<b>52.0</b>	0.2	2.7	100.0
전문가	<b>40.2</b>	38.5	21.4	0.0	0.0	100.0
공공기관종사자	<b>57.0</b>	26.5	14.0	0.5	2.0	100.0

[문 9] 권력층이 후보를 미리 내정한 채 공모를 진행하는 인사관행, 즉 낙하산 인사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찬성하십니까?

(단위: %)

구분	낙하산 인사는 공모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근절되어야 한다	낙하산 인사라고 모두 나쁜 것은 아니므로, 부적격 낙하산을 막는 데에 치중해야 한다	잘 모르겠다	계
일반시민	<b>60.5</b>	36.3	3.2	100.0
전문가	41.9	<b>58.1</b>	0.0	100.0
공공기관종사자	44.5	<b>55.0</b>	0.5	100.0

[문 10] 공공기관의 임원인사 방식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찬성하십니까?

(단위: %)

구분	현재와 같이 공모방식을 유지한 채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	공모의 실효성이 없으니 정무직 경우처럼 임명권자가 지명을 하고 검증절차를 거치는 방식이 낫다	잘 모르겠다	계
일반시민	<b>59.5</b>	29.7	10.8	100.0
전문가	<b>74.4</b>	25.6	0.0	100.0
공공기관종사자	<b>54.0</b>	45.0	1.0	100.0

[문11]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찬성하십니까?

(단위: %)

구분	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채도 감수해야 한다	공공기관이 부채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	잘 모르겠다	계
일반시민	<b>50.4</b>	39.4	10.2	100.0
전문가	<b>53.0</b>	45.3	1.7	100.0
공공기관종사자	<b>68.0</b>	28.5	3.5	100.0

[문 12] 공공기관의 인력운용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찬성하십니까?

(단위: %)

구분	공공기관은 다소간 여유 인력이 있더라도 일자리 창출에 더 힘써야 한다	공공기관은 여유인력의 전환배치 등을 통해 신규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	잘 모르겠다	계
일반시민	<b>56.3</b>	37.2	6.5	100.0
전문가	34.2	<b>62.4</b>	3.4	100.0
공공기관종사자	<b>71.0</b>	24.0	5.0	100.0

[문 13] 공공기관간에 협업과 정보공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(단위: %)

구분	①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	②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	①+② 잘 이루어지고 있다	③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	④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	③+④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	⑤ 잘 모르겠다	계
전문가	0.9	9.4	10.3	76.1	12.8	<b>88.9</b>	0.9	100.0
공공기관종사자	2.0	17.0	19.0	68.0	9.0	<b>77.0</b>	4.0	100.0

[문 14]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(단위: %)

구분	① 지금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	② 지금보다 다소 강화해야 한다	①+②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	③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	④ 지금보다 다소 간소화 시켜야 한다	⑤ 지금보다 대폭 간소화 시켜야 한다	④+⑤ 지금보다 간소화 시켜야 한다	계
전문가	26.5	28.2	<b>54.7</b>	23.9	18.8	2.6	21.4	100.0
공공기관종사자	1.0	4.5	5.5	11.5	37.0	46.0	<b>83.0</b>	100.0

[문 15]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은 다음 중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?

(단위: %)

구분	현재 공공기관은 중장기적 성과보다 단기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	현재 공공기관은 단기성과와 중장기적 성과 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	현재 공공기관은 단기성과보다 중장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	잘 모르겠다	계
전문가	<b>88.9</b>	11.1	0.0	0.0	100.0
공공기관종사자	<b>83.0</b>	15.5	0.5	1.0	100.0

[문 16]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량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?

(단위: %)

구분	① 매우 과한 편이다	② 대체로 과한 편이다	①+② 과하다	③ 적당 하다	④ 대체로 부족하다	⑤ 매우 부족하다	④+⑤ 부족하다	계
전문가	0.0	6.0	6.0	25.6	57.3	11.1	<b>68.4</b>	100.0
공공기관종사자	5.0	18.5	23.5	<b>55.0</b>	20.5	1.0	21.5	100.0

[문 17] 공공기관의 자율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(단위: %)

구분	① 매우 과한 편이다	② 대체로 과한 편이다	①+② 과하다	③ 적당 하다	④ 대체로 부족하다	⑤ 매우 부족하다	④+⑤ 부족하다	계
전문가	1.7	11.1	12.8	13.7	63.2	10.3	<b>73.5</b>	100.0
공공기관종사자	0.5	0.5	1.0	10.5	50.5	38.0	<b>88.5</b>	100.0